

‘중금속’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실시

울산시, 2022년까지 국내최초
외항강 하류~온산항 해역 구간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연안특별관리해역 제1차(2018년~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삭감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울산시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최초로 구리, 아연, 수은 등 중금속을 대상으로 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울산시의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생태계 보전과 오염된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외항강 하류에서부터 온산항 해역에 이르는 구간이 대상이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 수질 및 퇴적물 농도 유지·달성을 위해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허용 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는 제도로서 ‘중금속 대상’은 울산 연안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현재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에서는 ‘유기물(COD, 총인)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 울산시의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0일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대상 해역의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를 구리 73.1mg/kg, (현재 84.94mg/kg), 아연 188mg/kg(현재 227.7mg/kg), 수은 0.67mg/kg(현재 0.73mg/kg)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배출 부하량을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울산=최인택 기자 remark@

전남도, 632억 들여 ‘섬’ 기반시설 다진다

전라남도는 올해 632억 원 규모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섬을 국가 성장 동력 및 품격 높은 삶의 터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632억 원 가운데 국비는 519억 원으로 94%를 차지한다. 지난해 사업비(480억 원)보다 152억 원이 늘었다.

세부 사업은 ▲마늘기업 육성, 특산물 직판장, 공동작업장 등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분야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방조제, 배수갑문 등 농업기반시설 ▲주민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연륙·연도교, 도선건조, 여객선 대합실 등이다.

또한 도로, 하천, 급경사지,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

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 마리나, 캠핑장, 들레길 조성도 추진한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이뤄진다.

지난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2017년까지 총 3차 계획을 수립해 도서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지금까지 전남에 1조 7042억 원이 투입됐다.

2018년 최종 확정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은 전국 총 규모 1조 4972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48.5%인 7262억 원(국비 6820억 원·지방비 442억 원)이 전남에 반영됐다. 목표, 여수, 무안, 고흥, 보성,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11개 시군 198개 섬 680건이다. /전남=봉태영 기자

평택·당진항에 23억 투입 항로표지 확충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의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항로표지확충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항로표지확충을 위해 항해하는 선박위치, 장애물의 표시 등을 항해자에게 알려주는 시설로서(바다의 신호등) 등대, 등부표 등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평택해수청은 이를위해 평택·당진항 항로 중앙에 위치한 천퇴구역의 저수심

구간에 항로표지(가상 AIS) 5기를 확충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만 전면해상(입파도 인근)에 합정 계류용 부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레저보트 등 소형선박의 안전항행 지원을 위해 입파도와 풍도에서 수 집·제공하고 있는 풍향, 풍속 등 실시간 해양기상정보에 안개정보를 추가해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

부산시, 4년간 1조837억 투입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 박차

보행혁신종합계획 1호정책 확정 5대 전략 35개 과제 도출·추진

부산시는 ‘사람 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을 2019년 민선7기 1호 정책으로 확정했다. 이는 민선 7기의 핵심가치인 ‘사람’ 중심 시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정책 중 하나다.

시는 지난 2009년 광역단체 최초로 ‘걷고싶은 도시 부산만들기’ 선포 이후 갈매길 700리를 조성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보행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예산부족 등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보행정책 실행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 “맞춤형 혁신적인 보행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부산시는 9일 민선7기 2019년 1호 정책으로 모두 다 같이 걷는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 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

실무팀장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TF회의, 분과별 회의와 전체 워크숍을 통해 보행혁신 5대 전략 35개 과제를 도출, 민선7기 대표적인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도시 조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보행 연속성 확보와 학생·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성 제고, 편리한 생활 속 걷기 실현과 매력 있는 보행길 조성 그리고 부산발 보행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략에 맞는 35개 과제에 4년에 걸쳐 총 1조 837억원을 투입해 시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는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문화도시이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좋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도심열섬 완화 등 환경조성과 걷기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7기 보행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파격적인 부산발 보행정책 발굴을 위해 민간위킹그룹 ‘부산을 걷는다’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행혁신 TF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metroseoul.co.kr

장성군,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조성 총력

공영주차장 10곳에 262면 확보 조성 완료면 주차장 확보율 80%

장성읍 중심지인 영천리 일원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장성읍 영천리 일원은 중앙로를 따라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성의 대표적인 중심지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상가와 도로, 주택가가 자리 잡은 탓에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이에 장성군은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주택가와 시가지 인근에 10면 짜리 소규모 주차장부터 151면의 대형주차장까지 총 10개소에 262면의 공영 주차장을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6개소 주차장도 현재 조성 중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현재 영천리 일원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59%에 그치고 있다. 지금 조성중인 주차장이 완비되면 확보율은 19%가 늘어나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며 “여기에 소



장성 매화1동 공영주차장.

요되는 예산도 서둘러 확보해 장성읍 시가지가 쾌적한 주거 여건이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은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운전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빌라나 아파트, 주택가 인근 공터나 빈집 등을 사들여 중·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었다.

대신 주차수요가 큰 장성역과 장성터미널 인근에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했다. 장성역과 주공휴먼시아 사이에 151개 주차면을 확보해 기차 이용객과 아파트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토록 했다. 또 터미널 인근에도 100개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하는 중이다. 장성군은 주차장 조성도 시 경관 개선을 비롯한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빈 집과 방치된 공터 등을 매입해 공공시설로 만들자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높아진 것이다. 또 인근 상가 이용이 용이해져 상권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 군수는 “주차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 주차부터 교통 흐름 방해, 보행자 불편,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며 “주차장 조성으로 여러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bcy2020@

안성시, 15일 中소지원 시책 설명회

안성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19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인은 물론 소상공인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의 참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와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진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등의 관계자가 직접 중소기업 CEO 및 직원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한다. 아울러 상담장 현장에서 기관별 자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 중에 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께서 참여하여 정보를 얻을 것을 당부 드리며,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널리 알려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경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이보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설 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기해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월 7일까지 경기북부 지역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6개 분야에서 화재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고향집·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화재예방 안전 캠페인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환경 조성,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3

1월 11일 (금)
음력 : 12월 6일

수도권 날씨
-1 ~ 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7/5, 동두천 -5/6, 가평 -7/5, 파주 -7/6, 서울 -1/6, 양평 -6/5, 인천 0/5, 수원 -1/5, 용인 -1/5, 평택 -5/6, 백령도 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